

법무사 제1차 시험대비

시대에듀 법무사 실전 모의고사

<제 2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①		

응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시대에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dedu.c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 : [시대에듀 홈페이지 / 동영상 강의 내용 및 학습 질문]
- PC(컴퓨터) : 시대에듀 강의 재생 플레이어 창 > 우측 [학습질문]
- 모바일 : 시대에듀 앱 > 내강의실 > 강좌명 터치 > 커리큘럼 선택 후 상단의 [학습질문]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으며, 답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최종정답 공개** : [시대에듀 홈페이지 / 강의자료실]에 게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1】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설령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를 받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②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 ⑤ 회사는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2】 상업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 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때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 ⑤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 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3】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②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 ⑤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말소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한 때에는 사임 또는 임기만료에 의해 퇴임한 전임 이사의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문4】 다음 중 상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의 문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③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④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⑤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면,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문5】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는 창립총회를 거쳐야만 등기가 가능하다.
- ②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과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를 제외한 이사과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은 민법 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가칭 ‘사단법인 ○○○자산공제회’와 ‘○○○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문6】 주식회사의 이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1명의 이사에 대하여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 ③ 주식회사의 이어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어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어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어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어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

【문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주식회사의 경우 퇴임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 ④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한다.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이 중임일이 된다. 그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

【문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 존재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선임한다. 반면, 감사의 해임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한다.
- ③ 이사회 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지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회사 설립 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모두 창립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은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선임요건보다 해임요건을 가중한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문9】 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는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③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주권제출공고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주식액면분할공고만을 한 것은 적법한 주권제출공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도 해산하는데(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사원총회의 해산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사원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609조 제2항). 따라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제1항).
- ③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소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권자별로 이익을 진술할 수 있는 기간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등의 법령에서 첨부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문11】 다음 각종 회사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기는 자본금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하여야 하는데,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의 이행의 경우에도 검사인 등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언제나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출자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써도 그러한 출자를 하지 않은 사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자가 없는 자를 사원으로 정한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 ④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 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본점의 소재지, ㉤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 자본금의 액, ㉦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정관의 작성연월일 등이다. 공고방법은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설립등기 시 등기사항은 아니다.
- 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은 소송능력자이지만 하면 충분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을 요하지는 아니하므로 법원이 비송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도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 ③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나,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있다.
- ④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⑤ 항고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결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항고이유의 주장유무에 관계없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문13】 다음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른 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14】 다음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위허가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채권자가,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 내라도 할 수 있으며,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허가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부 상호 간에는 그 효력이 있다.
- ⑤ 법원은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해태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등기해태와 관련하여 과태료사건은 업무집행사원, 이사 및 외국회사 대표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고, 당사자에게 불의타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식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상용구로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 ⑤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집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